

# 자치경찰 소식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융합

발행처 |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실

창간호 | 2021년 9월9일



## <창간호 특집> | 대한민국 경찰의 大 변혁,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

- ①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자치경찰”
- ② 자치경찰제는 언제부터 논의되었나?
- ③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와 가치
- ④ 다른 나라 자치경찰의 모습은?
- ⑤ 현장의 외침, 그 우려와 기대
- ⑥ 각 시·도별 시범운영 전후, 경찰청의 노력은?
- ⑦ 전면시행 이후, 경찰청-위원회 간 긴밀한 소통·협력
- ⑧ 주민 곁에 더 가까이, 시·도별 맞춤형 치안 시책 추진
- ⑨ 자치경찰제가 나가야 할 방향

위원회 시책 | 자치경찰 현장에서는 지금

위원회 FOCUS | 수도 치안은 이곳에서부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편





##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자치경찰”

지난해 12.9.,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온 자치경찰제 도입이 확정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자치경찰제는 각 시·도별 준비 상황에 따라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7.1. 전국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정식 시행 당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 거버넌스와 연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생태계 조성과 자치경찰위원들의 균형감 있는 활동이 중요”

-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경찰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 김창룡 경찰청장 -

“자치경찰제가 모든 시·도에서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꽃필 수 있도록 모든 주체들이 서로 긴밀한 협력 필요”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범죄가 줄어들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해주는 우리동네 자치경찰을 기대”

-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

# 자치경찰제는 언제부터 논의되었나?

역대 정부에서는 다양한 자치경찰 모형을 논의해 왔으나 전국 도입은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위원회 중심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시안 마련</li> <li>추진여건 불비로 인해 시행 유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선택적 도입안 마련</li> <li>자치경찰법안 국회 제출, 회기 종료로 폐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선택적 도입안 유지</li> <li>법제화 무산</li> </ul>

그러다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확정하면서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며 제도 도입까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 홍익표 의원, 국가·자치경찰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경찰법」 개정안 발의('19.3.11), 다만, 20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20.5.29)
- 관계기관 협의 및 당정청 회의 개최, 예산·인력·사정 등을 감안한 국가·자치경찰 일원화 모델 전격 발표('20.7.30)
- 김영배 의원, 「경찰법」 등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20.8.4) - 법안소위 논의 및 공청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20.12.9) 및 공포·시행('21.1.1)

## 자치경찰제 도입의 의미와 가치

지방자치의 완성도 제고	민생 중심의 치안정책	분권화된 경찰 체제 구현	치안-지방행정 연계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방의 종합 행정력 제고	지역 특성에 부응하는 치안 정책 수립·집행	경찰 체제 분권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치안 예산 편성·집행 시·도일원화로 주민 요구 신속 반영, 종합적 업무 수행

## 다른 나라 자치경찰의 모습은?

구분	한국	프랑스	영국	일본	
도입단위	광역 / 전면	기초 / 선택	광역 / 전면	광역 / 전면	
사무	국가 경찰	포괄적 경찰사무 (자치경찰사무 제외)	포괄적 경찰사무	NCA(국립범죄수사청)를 통한 조직·국가적 범죄 정보 수집 및 수사, 업무조정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항 등 (국가공안, 광역범죄, 왕궁경찰, 통신·감식·통계·장비·감찰)
	자치 경찰	생안·여청·교통 등 민생치안사무	범죄예방, 질서유지, 공중위생 등	포괄적 경찰사무	포괄적 경찰사무
지휘·감독 및 견제장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을 행사  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 관련 법령·조직 등 업무 수행,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명령 가능	내무부장관은 도시시·기초단체장·지검장 요청 또는 자치경찰자문위원회(내무부장관 직속) 협의로 자치경찰감사 결정 (감사는 경찰청 감사실에서 수행)  자치경찰은 업무 중 인지한 모든 중범죄 또는 경범죄를 관할 국가경찰에게 즉시보고	내무부장관, 지역치안위원장*, 지역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의 4원 체제 운영  *선출직으로 △지방경찰청·차장 임명 및 해임권 △예산 및 재정 총괄권 △지역치안계획 수립 등 권한 보유  ** 지방의원으로 구성되어 △예산 감사 △지역치안계획 검토 등 권한 보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지사의 소할(관리) 하에 있으며, 독립적으로 권한 행사 (규칙제정, 감찰지시, 징계요구, 지원요구)  경찰청장관은 '통달' (훈령, 일반적 지침 및 지시의 성격)에 의해 자치경찰을 지휘·감독, 조정·통제	

# 현장의 외침, 그 우려와 기대

그간 당정청에서 논의해온 이원화 자치경찰제 모델이 국가경찰 신분은 그대로 두고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는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면서 전국 경찰관들은 뜨거운 관심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 자치경찰제 모델이 이원화 → 일원화 모델로 변경된 이유

### 업무 혼선, 재정부담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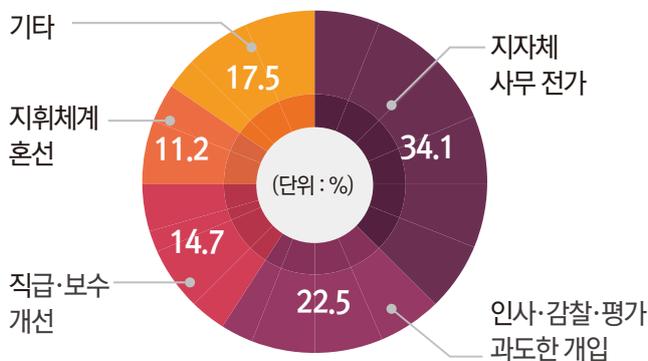
- 이원화 모델은 △기구·관서 신설 등 초기 비용 과다 △지구대·파출소 중복 운영 등에 따른 업무혼선 우려 지속 제기
-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악화 등 사정 변경, 경찰관 4만3천명 지방직전환이 필요하나 희망자 부족 등 충원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도 존재

### 안정적 치안 유지

- 단일한 조직 체계 내에서 경찰관 개인의 법적 권한 변동 없이, 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현행과 동일하게 업무 수행
- 국민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범죄신고 △경찰민원 처리 가능

경찰 내부망 게시판은 새로운 모델에 대한 거침없는 제언으로 연일 뜨거웠고 각 지역에서는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성명서 발표,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제도 보완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도 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대대적인 의견수렴(20.8.25~9.1)을 실시하여 총 8,975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청장 등 경찰청 지휘부는 △서범수 의원실 주관 국회 토론회(20.9.17) △경찰청·김영배 의원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주관 국회 토론회(21.11.3) 등에 참석하여 완성도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현장 의견수렴 결과



## 자치경찰제 국회 토론회



‘자치경찰제’라는 전례 없는 변화 속에 모든 구성원이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 실제로 경찰이 요구한 사항들이 상당 부분 법안에 반영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경찰을 사랑하고 조직 발전을 기대하는 전국 경찰관들의 열정으로 맺은 귀중한 결실일 것입니다.

## 자치경찰제 최초 발의 법안 기준 주요 변경 사항

### 자치경찰사무 삭제·수정

-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 보호조치’ 삭제
-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청사 경비’,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로 수정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경찰공무원 배치 의무화

### 시·도지사의 부당한 관여 제한

###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감찰권한 삭제

# 각 시·도별 시범운영 전후, 경찰청의 노력은?

각 시·도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전후하여 경찰청의 시간은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특히, 각 시·도의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실에서는 △표준조례안 마련 △법령 해설서 배포 등 새롭게 변화된 치안시스템 안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 자치경찰제의 핵심, 각 시·도별 표준조례안 제정 및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지원

개정 「경찰법」 시행 직후인 2021년 초에는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선결조건인 ‘자치경찰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각 시·도별 자치경찰 조례 제정을 뒷받침하고자 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배포하였습니다.

### 표준 조례안 주요 내용

-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 등

또한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해 각 시·도를 대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자치경찰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구체적 절차를 안내문에 담아 각 시·도에 배포하였습니다.

### 결격사유 확인절차 안내문 주요 내용

- △시·도의 추천 요청시 △추천기관 후보자 추천시 △시·도지사 임명시 등 단계별 확인 절차 설명
- 「경찰법」상 규정된 결격사유별 △타 기관 공문협조 △행정정보공동이용·비위면직자관리 등 시스템활용 등 확인 방법 상세 안내

특히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경찰법」 제19조에 따라 위원간 균형있는 성비 확보 및 인권전문가의 1인 이상 포함을 위해 각 시·도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결과가 다소 못 미치는 측면이 있어 현재 대통령령 개정 등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 감격적인 첫 삼을 뜨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개최



4.2. 강원도를 시작으로 각 시·도별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였으며, 출범식과 함께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 이하 경찰청 지휘부는 부산·대구 등 총 15회의 모든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서울·충남은 출범식 미개최, 경기 남·북부는 통합 행사). 이 자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무척 뜻깊은 순간”이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뺨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각종 후속 지원 강화

각 시·도의 시범운영 개시와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 자치경찰사무 담당 범위

-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감찰·징계요구권 등의 행사 범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
- 자치경찰사무와 국가경찰사무가 혼재된 경우 담당 사무의 성격과 비중 등을 고려하여 범위 확정

### 자치경찰사무 성과 평가, 인사

- (경찰서 평가) 경찰청에서 제시한 ‘자치경찰 자율지표 POOL’ 내 자치경찰위원회 성과지표 설계
- (경찰서장 평가) 자치경찰위원회 주요시책 달성도 등 평가·경찰청 통보, ‘책임지휘역량평가’ 항목 반영
- (인사권) △각 시·도경찰청-위원회 간 인사권 협의 △경찰청-위원회 간 ’21년(下) 11개 시·도경찰청장 인사 협의

### 자치경찰 법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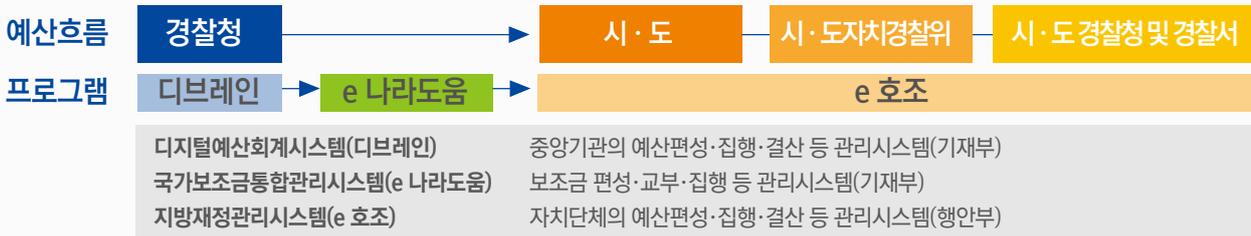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표준 세칙안」안내  
자치경찰위원회 산하 구성, 자치-국가경찰사무의 명확한 구분 기준 정립 및 치안-지방행정 연계 서비스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운영방안 규정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에 관한 표준 규칙안」안내  
자치경찰위원회의 필수 심의·의결 사항과 시·도경찰청장 재량 사항 구분 기준,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권 행사 근거 등을 규정
- ‘알기쉬운 자치경찰제 법령’ 해설서 제작·배포  
외부 교수 자문, 자치분권위원회·행안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조문별 축조해설 △Q&A 등 소개



### 자치경찰 재정 지원

- 국가기관인 시·도경찰청에 대한 지방예산 배정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행안부 훈령 정비  
-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7.20 개정 완료 / -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중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접속 환경 구축  
- 행정전자서명(GPKI)으로 시·도행정시스템에 접속 가능도록 행안부·경찰청 정보화 관련 부서 협의

#### 자치경찰사무 예산 흐름



### 1호 시책 발굴 지원, 교육·홍보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우수시책 발굴 참고 자료 제공 · 자치경찰제 카드뉴스 제작·공유
- ‘자치경찰제 이해’ 교육자료 작성·배포 일선 경찰관 및 시·도공무원, 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 신입 경찰관 등 대상 교육 추진

### 자치경찰위원회 현장 방문

- (목적) 자치경찰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지원 방안 모색, 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
- (방문단)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과장 및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과장
- (내용) △위원장·상임위원 면담 △사무국 직원 간담회 개최, 자치경찰제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 9개 위원회 완료(코로나19 상황 고려, 나머지 추후 예정)

# 전면시행 이후, 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간 긴밀한 소통·협력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서와 자치경찰위원회 간 업무 정책 협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던 기존의 치안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함을 증명했습니다.

## 주민 안전의 드림팀! 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의 COLLABORATION!

### 경찰청 생안국 & 자치경찰위원회

- ▶ ‘범죄예방·사회적약자 보호 정책 협의체’에 상임위원 참여 요청(7.19)  
- 지역별 주요 치안 현안을 다루는 논의의 장 마련
-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 추진(7.13)  
- 자치경찰사무임에도 전국적 치안유지 필요한 사무로 경찰청장 지휘·명령권 행사  
※ <관련 근거> 「경찰법, 제32조(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
- ▶ ‘범죄예방관리구역 제도 개선안’(7.5),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매뉴얼’(7.5) 등 공유
- ▶ ‘하계 방학기간 위기 청소년 선도·보호’ 추진(7.16)
- ▶ ‘양육시설 등 보호종료 아동 지원’ 추진(7.29)

### 경찰청 교통국 & 자치경찰위원회

-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설명자료’ 공유(7.9)
- ▶ ‘여름 휴가철 대비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7.13)
- ▶ ‘이륜차 폭주행위(소음민원) 및 불법 튜닝 단속’ 추진(7.21)

## 주민 곁에 더 가까이, 시·도별 맞춤형 치안 시책 추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의견 수렴 △일선 현장 방문 △치안여건 분석 등을 토대로 △현장 경찰의 대응력 향상 △주민의 요구 적극 수렴 △지역별 특성 반영 등 맞춤형 치안정책을 속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 현장 경찰의 대응력 향상

#### <대전·경북>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정신질환자 대응 강화

#### <충남>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신설’

주취자 처리 중 자해 등  
사고 방지, 현장 부담 해소

#### <강원> ‘지구대·파출소 환경개선’

도 예산 6억원 투입,  
현장 근무여건 개선

#### <경남> ‘경찰관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

도 예산 1.8억 확보,  
현장 경찰관 복지 증진

### 주민의 요구 적극 수렴

#### 세종,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추진’

-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지역관서장 추천

#### 울산, ‘더 빠르고 충실한 교통안전 환경 조성’

- 교통안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주민 요구 적극 반영

#### 인천,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 어린이 보호 10대 과제 선정, 관계기관간 협력 강화

#### 전북, ‘사회적 약자 종합 안전대책’

- 다양한 소통채널로 주민의견 수렴, 아동·청소년 보호 총력

#### 경남,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 어린이 통학로 전수 조사, 등하굣길 안전 확보

#### 대구, ‘시민 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 시민단체와 MOU 체결, 자치경찰 정책 의견수렴

### 지역별 특성 반영

#### 광주,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 타 지역 대비 높은 어린이 인구비율 고려, 안전대책 추진

#### 부산, ‘해수욕장 범죄예방활동’

- 휴가철 피서객 증가 예상,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전개

#### 전남,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대책’

- 도민 고령화 및 독거노인 증가 고려, 노인 보호 강화

#### 제주, ‘휴가철 안심 제주 4YOU’

- 휴가철 성범죄예방·교통사고예방·순찰강화·방역확보 집중

#### 충북, ‘농촌지역 농산물 도난예방 종합대책’

- 농산물별 수확지역·시기 고려, 순찰 등 대책 추진

#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란 존재하지 않듯 ‘자치경찰’이라는 배는 이제 막 그 첫 발을 내딛고 순항하고 있습니다. 때론 거친 바람이 불어오는 그 미지의 여정 속에서도 항해자는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 나갑니다. ‘자치경찰’이라는 배를 이끄는 항해자, 바로 경찰청과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전국의 모든 경찰관일 것입니다.

## 자치경찰이

막 출범한 지금, 당면한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시민·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현재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총 126명 중 여성위원은 25명(19.8%), 인권전문가위원은 20명(15.8%)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방 간 치안정책 관련 논의를 위해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으며 자치경찰제가 현장에서 아직 피부로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귀 담아 들어야 할 과제입니다.

## ‘자치경찰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제 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주민 안전’, ‘주민 안심’ 그리고 ‘주민 행복’입니다. 어쩌면 현장에서는 경찰청의 이러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디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한 집이 오래가듯, 가보지 않은 길, 자치경찰의 백년지대계를 튼튼히 세운다는 마음으로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 ‘주민 안전’, ‘주민 안심’ 그리고 ‘주민 행복’



## 각종 제도 정비로 자치경찰제 안착에 박차

7.1.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 인사관리규칙 △위원회의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범위 및 절차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경찰서(장) 성과평가 계획 △감사·징계 등 요구 규칙 등 각종 제도 정비를 통해 자치경찰제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관리규칙의 심의·의결로 위원회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임용권 행사 범위와 시·도경찰청장에 일부 재위임되는 임용권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권 범위가 확립되어 향후 관련 사무가 신속하게 수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심의·의결사항

### 부산, “스토킹 STOP!”, 전국 최초 스토킹 범죄 선제적 대응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난 7.26. ‘스토킹 피해자 지원 솔루션 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해당 협의회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의료기관, 법률전문가, 심리상담가 등으로 구성되어 주기적 사례회의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상담·법률·의료·재정 등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협의체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고조에 따라 10.21.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솔루션 협의회의 신설은 법 시행 前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세종, “내 손으로 뽑는 지구대·파출소장”,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도입

세종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7.23. 제4차 회의에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이러한 위원회의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의견 제시에 있어 주민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신선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 시민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보직 희망 대상자로부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후 질의·응답을 거쳐 대상자의 △ 리더십 △사회성 △업무추진력 △의사전달력 △고객지향성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보직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 제주, “아름다운 섬 우도를 돌려주세요!”, 기관 간 협업으로 우도 교통문제 해결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는 지난 7.30.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도 교통정책과, 제주시 우도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지부 등과 함께 우도 內 교통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청정 섬 우도는 그간 관광객 증가에 따라 렌트 차량 수리비 사기, 불법 주·정차, 교통체증 등으로 몸살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교통시설 점검·보완, 주민 홍보 등의 대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자치경찰 PHOTO NEWS\_

### 경기남부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 단속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지자체 공무원 등 700여명으로 합동점검단을 구성, 관내 유흥시설 대상 방역수칙 위반을 집중 단속하였다.(7.23)

### 부산

####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와 공동으로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7.28)

### 인천

#### 강화 동막·민머루 여름파출소 방문



인천자치경찰위원장은 강화경찰서 동막·민머루 여름파출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실태를 확인하고 파출소 근무자를 격려했다.(8.3)

## '21.6.29. 서울자치경찰의 새로운 시작!



이하에서는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출범 이후 서울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 추진 현황을 소개하겠습니다

## 자치경찰제 시행은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21.1.10.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자치경찰 출범을 위한 본격적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장자문단을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서울경찰청-서울시 합동으로 자치경찰제 관련 홍보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 논의와 토론, 그리고 공감대 형성

자치경찰 관련 조례 제정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선행조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사무 범위 등을 규정하는 부분에 대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는 수차례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였고, 마침내 표준조례안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21.5.22).



##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변호사(3, 경찰출신 1명 포함), 대학교수(2), 전직경찰(2) 등 전문성·학식·덕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위원장 김학배 前울산청장/상임위원 김성섭 前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사무국은 서울 중구 무교동에서, 총 55명으로 운영되는 중입니다.

##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모든 역량 집중

출범 후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우선하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안심지원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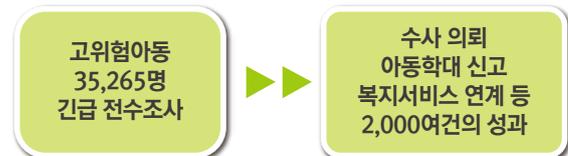
※ 서울경찰청-서울시 합동 야간순찰 병행 예정

서울시 1인 가구 밀집 지역(51개동)

중부 장충동(동국대 후문), 종로 가회동(북촌한옥마을)  
강남 논현 1동 등

### 아동학대 예방 대책

서울경찰청 및 서울시 공동



자치경찰의 존재 이유는 바로 시민들에게 다가서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INTERVIEW

김학배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 초대 서울자치경찰회 위원장이 된 소감 부탁드립니다.

초대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종래 국가경찰제와 비교할 때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강공원 안전관리를 위한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순찰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주민 친화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경찰행정 부분에서 무엇이 가장 크게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국가경찰제의 획일적 운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제는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연계된 다양한 치안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자치경찰이 지역 인사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위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시의회, 위원추천위 등 다양한 기관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되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지역 인사들의 영향력로부터 자유롭게 치안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 서울시민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현장 경찰관과의 소통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장소통, 간담회, 온라인 소통 창구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장경찰관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 마지막으로

### 서울자치경찰위원장으로서의 포부 부탁드립니다.

서울 자치경찰의 목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

### 김학배 위원장 약력

1958년, 경상북도 의성 출생

경북대 대학원 법학 석사 / 사법고시 제26회 / 울산경찰청장 / 경찰청 수사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現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